

세계적 변혁기의 민주주의 재조명*

-마르크스를 현대의 논쟁에 접목시키는 길-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I.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민주주의를 논하는 자리에서 사회주의의 테마를 꺼내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소련과 동구에서 제도화되었던 ‘민주집중제’(방해란, 1991; Waller, 1981)가 붕괴함에 따라 마르크스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진보적 지식인들에게 절박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근래 소련의 실험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나 서구의 잘 정립된 사회민주주의 체제에서 조차 관료제가 점차 확대되고 새로운 사회 운동이 증식됨에 따라 사회민주주의가 더 이상 매력적인 정치적 대안이 되지 못하는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 부담은 더욱 커진다.(Habermas, 1989; Offe, 1984) 이 때문인지 오늘날 서구에서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치를 새롭게 접목시키려는 흥미로운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다.(Bobbio, 1989; Heuer, 1989; Keane, 1988; Pierson, 1986; Haug, 1987) ‘혁신 자유주의’와 ‘민주 사회주의’의 이념적 공통분모를 추적한 차인석 교수(1990)의 논문도 이런 맥락에서 음미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런 배경에서 이 글은 마르크스의 이론을 정통 노선의 함정으로부터 구출하는 방식으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가치있는 요소들을 새로운 기초 위에서 절충 종합함으로써

* 이 논문은 1990년 8월 29일에서 31일까지 개최된 서울대학교 부설 철학사상연구소 설립 기념 국제철학 학술대회 “새로운 문명에 대한 철학적 조명”에서 영어로 발표한 것을 우리글로 고쳐 쓴 것임.

새로운 방향의 민주주의를 탐색하기 위해 써어졌다.

그러나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민주주의를 한번에 정의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이 문제를 비교적 명료하게 다루고 있는 헬드(David Held, 1987)는 신우파와 신좌파의 최근의 논쟁 구도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를 10개의 모델로 나누었다. 이러한 이론적 작업 외에도 민주주의 문제를 둘러싼 투쟁은 군사적·관료적·전통적 형태의 권위주의가 여전히 지배적인 제3세계에서뿐 아니라(O'Donell, Schmitter & Whitehead, 1986 ; 한상진, 1988),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는 레닌주의적 기획이 파산하게 된 많은 국가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Kagalitsky, 1990 ; Mezhenkov Skelley, 1989) 심지어는 서구 복지국가들에서도 민주주의는 중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회민주주의는 그동안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개혁들을 성취해 냈으나(Hamilton, 1989 ; Korpi, 1983), 이제는 더 많은 사회적(societal) 민주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사회 운동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Müller-Rommel, 1989)

이러한 전세계적인 민주화 투쟁과 그에 따르는 역사적 변화들 속에서 민주주의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기존의 모델들에 전적으로 만족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견해나 레닌주의적 견해 모두 내가 이제부터 논의하게 될 민주주의의 이중적 과정, 즉 제도 안의 민주 개혁과 제도 밖의 해방적 사회 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지 못했다. 사회민주주의 역시 이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점차로 제도화한 조합주의적 타협의 틀 속에서 생산주의적(productivist) 발전 논리에 집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시민 사회의 자율성과 그 안에서의 사회 운동의 역할을 민주주의의 입체적 구도에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아 로크(Locke)에서 하이예크(Hayek)에 이르는 자유주의의 전통은 입헌국가와 더불어 개인의 자유·권리·자율성을 옹호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가치중립적

이고 비권력적인 조정 기제로 취급함으로써 노동 시장과 권력 관계를 적절히 다루는 데 실패했다.(한상진, 1989a 참조) 우선 시민 사회는 사적 권력의 강한 영향을 받기에 “동등한 참여, 적절한 정치적 이해, 그리고 정치적 문제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위한 조건들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자유민주적 국가 구조 역시 독점 자본과 같은 “시민 사회의 권력 중심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조직적 힘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Held, 1987 : 282~283) 한편 마르크스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한계와 허약성을 보여주는 데는 강력한 면이 있지만, 이를 극복할 민주주의의 대안에 대해서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Pierson, 1986 : 16) 보비오(Bobbio, 1987 : 32)가 지적한 바대로 마르크스주의가 제시한 처방은 대안적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으로서, 또는 사회주의의 현실을 파악하는 지침으로서 거의 쓸모없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으로부터 그 결함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이로부터 자유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안적 민주주의에 대한 패러다임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접근은 ‘해체’와 ‘재구성’으로 특징된다. 예를 들면 데리다(Derrida)의 ‘해체’는 원래 언어철학에서 관념론과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의미를 가진 것이었지만, 이를 마르크스주의에 적용시킬 경우 전통 노선의 전제들을 무너뜨리면서 탈레닌주의적 다원성의 공간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Ryan, 1988) 그러나 나의 주장은 이러한 의미의 ‘해체’가 보다 명백하게 ‘재구성’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래의 형이상학의 해체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전망을 가능케 하는데, 마르크스주의의 경우 그것은 그동안 무시되었거나 잠재화되었던 마르크스의 어떤 사상을 인지 가능한 풍부한 내용으로 재구성 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따라서 재구성은 적어도 함축적인 형태로는 모든 내재적 비판에 전제되어 있다.

나는 이러한 방향을 따라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진정한 통찰들과 자유주의를 화해시키고자 했던 논의들, 더 나아가 민주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이며 자유주의적인(libertarian) 변동 이론을 종합하고자 했던 논의

들에 주목할 것이다. 그러한 논의들은 대부분 유럽의 신좌파 담화들이지만, 우리에게 풍부한 실천적 함의가 있는 주장과 통찰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 있는 변증법적 방법에 의하면, 모든 사회 과정은 사회구성체 속에 새겨진 모순들 때문에 본질적으로 동태적이고 열린 지평을 갖는다. 즉 어떤 사회 질서이건간에 스스로 존립할 수 있는 토대와 더불어 다른 것에 의해 대체될 원인을 갖는다. 그러나 대안의 잠재력이 무한히 열려 있지 않고 역사적 맥락에 의해 제한된다는 사실 역시 중요하다. 그 잠재력은 사람들이 기존 사회제도의 한계를 깨뚫어보고 대안의 가능성을 의식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취해 온 것을 유지하면서 과거 실천들의 결점을 극복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적 모델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어쩌면 레닌주의가 왜 오늘날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없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토론을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 논의는 사회민주주의에로 까지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에 관해 오직 간략하게만 언급하겠다. 그리고 나면 레닌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차례가 된다. 물론 우리는 마르크스에게까지 그 근원을 추적해 들어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비판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서도 우리는 종종 간과되어 온 마르크스 자신의 통찰을 레닌주의와 구별시켜 새로운 바탕 위에서 이어받을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이 글에서 여기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력의 결과들이 민주주의적 실천을 향상시키는 데 갖는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II. 레닌주의의 부정적 유산

나는 레닌주의가 그 모국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권위는 유지되고 있지만, 그의 세계관(제국주의론) · 정치관(국가론) · 계급관(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 등은 모두 도전받고 있다. 폐레스트로이

카는 초계급적이고 전지구적인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또 계급 이해를 중시하지만 전인류적 이해의 우위성을 확증하면서 레닌주의의 기본 패러다임을 반박하고 나섰다. 어쩌면 이만큼 강렬한 것은 아니지만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위기 역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민주주의는 점차 대규모의 저항이 의회 밖에서 일어남에 따라 정치적 모순에 둘러싸인 채 많은 풀기 힘든 문제들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이다.(Burns & Will, 1988) 여러 논자들 중에서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1989)와 오페(Claus Offe, 1984, 1985)는 이러한 위기의 경향들을 설득력있게 포착하여 “복지국가의 위기와 유토피아적 에너지의 소진”이라는 테마를 제출했다.

이에 관해 우선 관심끄는 것은 레닌주의적 민주주의의 프로젝트가 왜 위기에 부딪치는가를 밝혀주는 분석이다. 보비오(Bobbio)의 논의가 적절한 출발점이 될 것 같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보비오(1987:39)는 다음과 같이 고찰한다.

“사회주의는 결코 민주주의를 거부한 적이 없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사회주의는 항상 자신을 민주주의의 완성된 형태로 제시한다. 단순히 형식적인 것만이 아닌 본질적인 민주주의의 형태, 즉 민주적 이상의 역사적 완성태로 제시한다. 정치적 민주주의뿐 아니라 경제적 민주주의, 소유자에 의해 구성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생산자들에 의해 구성된 민주주의, 대의적이고 위임된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비-위임된, 즉 직접적 민주주의, 의회에 기초한 것만이 아니라 노동자 위원회에 기초한 민주주의 등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그럼에도 보비오는 레닌주의가 부르주아적 민주주의에 대해 실현 가능한 어떤 대안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의 대답은 명백히 부정적이다. 그는 국가 사회주의가 이룩한 사회·경제적·기술적 진보에 비해 그 정치적 제도는 낡아빠진 것으로 본다. 보비오는 그 후진성이 바로 레닌주의의 한계와 결정적으로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는 사회주의의 가치를 복원시키려는 자세로 “어떤 사회주의를 지향할 것인가?”의 쟁점을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

보비오는 레닌주의가 정치를 이해하는 방식에 무엇인가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국가란 마치 정복되고 분쇄되고 소멸되어야 할 대상인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사회주의적 목적에 맞는 민주주의의 제도와 절차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약했다는 것이다. 또는 마르크스가 분석했던 빠리 꼬뮌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확대 해석함으로써 인권·법치주의·권력 분립·의회제도 등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오류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국가 소멸론에 집착함으로써 민주주의적 국가 조직의 문제가 간과되는 사이 국가 권력을 획득한 당이 국가 자체를 대신하게 되는 현상이 생겨났다는 것이다.(Bobbio, 1987 : 40) 레닌주의는 결국 자신이 제시하는 민주주의의 추상적 이상과 이를 실현시키는 제도적·절차적 수단의 결핍 사이의 넓은 격차에 의해 무너지게 되었다.

간략하지만 그러나 정확하다고 판단되는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 즉 이러한 결함에 대해 마르크스 자신이 과연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물론 마르크스주의 안에서 좋은 것은 다 취하고 나쁜 것은 다 버리는 단순한 방식으로 자기 성찰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마르크스주의와 단절한다는 것은 이것이 지난 이론적·실천적 강점의 어떤 부분을 잊어버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충분히 깊게 파들어가고자 한다면, 새로운 상상력의 진원으로서 마르크스의 사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III. 마르크스의 재해독과 마르크스주의 비판

모든 이념이 그러하듯이 민주주의의 개념 역시 시대에 따라 구성과 초점이 변화하였다. 19세기 후반의 상황에서 마르크스는 혁명을 추구하면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데 큰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오늘의 시점에서 그의 사상을 재음미해 보자면,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운동의 양대 흐름 즉 사회민주주의와 레닌주의의 어느 것과도 다른 고유한 특징을 가졌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 점을 확립하려면 많은 주의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한 가지 조건, 즉 마르크스의 저술, 특히 빠리 꼬뮌의 체험을 다룬 「프랑스 내전(內戰)」을 엥겔스나 레닌의 시각에서 보는 독서법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한 보기로 보편선거권을 중심으로 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견해를 살펴보자. 이에 관한 마르크스의 진술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그의 생존 당시 유럽의 사회주의 운동이 노동자의 권리 신장과 함께 보편선거권을 향한 투쟁에 앞장섰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르크스는 보편선거권의 진보적 의미를 지지하면서도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을 회석시키는 방식으로 이것이 제도화되는 경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 입장은 프랑스 혁명에 대한 그의 3부작에 식별 가능하게 드러나 있다. 그의 논의는 체계적으로 이론화된 것이라기보다는 발랄한 재치로 유동적 국면의 계급적 분석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일반적 해석을 끌어내는 데는 조심할 점이 많다.

예컨대 「브뤼메르 18일」에서 마르크스는 보나빠르뜨 독재체제 즉 상비군·관료제·경찰·성직제도·사법제도 등의 기관을 동원하여 “사회전체를 하나의 그물로 엎어매고 모든 땀구멍을 막아버리는” 국가 권력의 억압성과 기생적 성격을 질타하였다.(Marx, 1852 : 242) 또 지금까지의 “모든 혁명은 이 기구를 분쇄하는 대신에 완성시켰다”고 비판하였으며, 이런 맥락에서 “관료제는 지배 계급의 도구였다”고 주장하였다.(Marx, 1852 : 242) 레닌은 후에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부각시켰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썼어졌던 「프랑스의 계급 투쟁」에서 마르크스는 1848년 5월 제헌국민의회의 헌법 초안에 관해 다음과 같은 관찰을 보이고 있다.

“이 헌법의 가장 포괄적인 모순은 다음과 같은 점에 내재해 있다. 헌법은

제계급의 사회적 노예 상태를 영구화시켜려는 의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프롤레타리아트·농민·쁘띠부르주아지에게 보통선거권을 부여하고, 그것을 통하여 정치적 권력을 소유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헌법은 자신이 그 사회적 권력을 인정하였던 계급 즉 부르주아지로부터 그들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정치적 보증을 철회시켰다. 헌법 때문에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지배는 민주적 조건 속에서 제약받아야 했으며, 이런 조건들은 적대 계급이 승리하고 부르주아 사회의 토대를 위태롭게 하도록 도와주었다.”(Marx, 1850 : 70~71)

이 관찰은 의회민주주의를 단순한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 수단으로 보는 견해와 명백히 구별되는 마르크스의 유연한 시각을 돋보여 준다. 그는 민주주의 제도와 부르주아 지배 사이의 긴장을 직시했던 것이다. 이것은 국가와 정치를 보는 시각에서는 종종 마르크스주의를 특징지었던 경제 결정론 또는 계급 결정론의 경직성을 넘어서는 것이다.(Spencer, 1979 ; Jhnston, 1983)

물론 마르크스는 보편선거권이 계급 지배의 현실을 은폐하는 속임수로 기능한다는 점을 깨뚫어보았다. 또 프랑스의 농민 대중이 보나빠르뜨 독재체제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보편선거권의 현실적 부작용을 「브뤼메르 18일」에서 다각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보편선거권이 명실상부하게 확립되면 이것이 “단순한 속임수의 수단으로부터 해방의 수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기에 그는 보편선거권은 “유럽 대륙에서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총애받는 어떤 것보다 더 사회주의적인 조처”가 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며,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평화적 방식으로 사회주의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Johnston, 1983 : 343~347로부터 재인용)

실제로 마르크스는 1840년대에는 영국 국민현장 운동을 적극 지지했으며, 그 뒤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면서도 위계 모델보다는 민주주의적 대중 노선에 충실했던 것처럼 보인다. 이 점에서 보편선거권은 불가결한 것이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절대 다수가 되는 산업 사회를 전제하면서 다수결의 원칙 위에서 사회주의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할 수 있

다. 그는 근본적으로 반엘리트주의적·반관료적이었으며, 이 점에서 블랑끼(Blanque) 노선과는 다른 민주주의의 지향을 지녔다. 빠리 꼬뮌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마르크스는 위계적·중앙집권적 조직 방식에 반대하여 “보편선거권을 위계적 서임으로 대체하는 것보다 꼬뮌의 정신에 더욱 생소한 것은 없다”고 못박고 있다.(Marx,1871 : 319)

그러나 마르크스는 보편선거권의 대의제 원칙을 지지하면서도 의회민주주의의 제도적 실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단순화시키자면 시민 사회를 계급 지배의 족쇄에 맡겨놓은 채 국가를 분리시켜 3년 또는 6년 만에 선거를 치르는 방식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치적 해방 그 자체는 가치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만약 계급 구조에 닿을 내리고 있는 거대한 실질적 불평등을 외면한 채 시민권의 평등에만 안주한다면, 그 결과는 매우 제한적이고 환상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시민 사회의 계급 지배를 은폐하는 평등한 시민권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폭로했다.(Buchanan,1982) 마르크스의 입장은 국가와 시민 사회를 자본주의적으로 분리시킬 것이 아니라 보편선거권의 참뜻을 사회 모든 영역에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런 인식은 오늘날 정치·경제·사회 모든 부문의 민주화란 테마로 쉽사리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한상진,1990 a) 문제는 이런 포괄적인 민주화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떤 제도적 틀로 관철시킬 것인가 하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에 관해 우리는 마르크스 당시에는 없는 일이지만 그 뒤 사회민주주의와 레닌주의가 분화하면서 그 사이의 대립을 발견한다. 그러나 오늘의 시점에서 재해석해 보자면, 그 어느 것도 마르크스의 고유한 사상으로부터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사회민주주의의 요체는 보편선거권에 기초한 노동자 정당의 의회 진출과 정치권력 공유에 기초한 제도 개혁으로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방법론으로 특징된다. 이를 통해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의 특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전략은 스웨덴의 경험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의미심장한 개혁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이 전략만으로 과

연 사회주의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주의의 목표만이 아니라 이에 접근하는 방법론에서도 사회민주주의가 과연 마르크스의 민주주의관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위험은 레닌주의로부터 온다고 생각한다. 레닌의 저술과 활동으로부터 민주주의의 가치를 추출하는 것은 별도의 작업을 요구한다. 내가 여기서 강조하려는 것은 레닌이 마르크스의 빠리꼬뮌 분석으로부터 사회주의적 국가 조직의 모형을 발견하고자 했는데 그 방식에 재고를 요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레닌은 「국가와 혁명」에서 마르크스의 비체계적 저술들에 고도의 체계성을 부여하였다. 즉 마르크스는 1852년 「브뤼메르 18일」을 통하여 자본주의적 국가 기구들의 분쇄와 파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나 대안을 찾지 못하던 중 드디어 1871년 「프랑스 내전」에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의 모형을 찾았는데, 이 모형은 곧 꼬뮌이며 이것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로 특징된다고 하는 것이다.(Lenin, 1917 : 386)

따라서 해석의 문제가 제기된다. 분명한 점은 ‘꼬뮌=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는 등식이 마르크스 자신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 등식은 「프랑스 내전」에 대한 1891년 엥겔스의 서문에 나타난 후 레닌에 의해 체계화된 것이다. 마르크스는 분명 그의 저술을 통해 국가관료 기구들의 억압성, 의회제도의 허구성, 노동운동 탄압의 야만성 등을 비판하였지만, 과연 사회주의적 조직의 일반적 모형으로서 입법·행정·사법의 분화가 소멸된 꼬뮌을 제시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다. 왜냐하면 꼬뮌은 내전 상황의 독특한 집합체험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꼬뮌을 “노동자의 정부”·“생산자의 자치 정부”·“노동의 경제적 해방을 가능케 하는 정치 형태” 등으로 묘사함으로써 노동자가 여기서 주권자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꼬뮌의 운영 방식에 관해서는 예컨대 부정부패가 없이 돈이 적게 듣다는 점, 지사나 시의원같은 공직자만이 아니라 치안판사·재판관 등도 “보통선거로 선출되어 시민에게 책임을 지고

즉시 소환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은 의회민주제의 폐기보다는 그 원칙의 사회적 확산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Marx, 1871 : 317~318)

문제는 72일 간 지속된 빠리꼬뮌의 특수한 경험으로부터 사회 조직의 일반적 원칙과 모델을 끌어내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 하는 것으로 모아진다. 예컨대 꼬뮌에 의한 모든 국가 권력의 인수가 새로운 사회 조직의 일반적 원리로서 타당성을 갖는가의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레닌은 명백히 이로부터 ‘민주집중제’라는 일반화한 원칙을 끌어내고 있다.(Lenin, 1917 : 390) 물론 레닌의 사상도 러시아의 시대사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모되었음을 널리 알려진 일이다. 그러나 모든 분파주의를 엄격히 단죄한 민주집중제는 레닌주의적 프로젝트라고 해야 마땅하다. 이 프로젝트를 마르크스에 부과시킴으로써 마르크스는 마치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관점에서 모든 국가제도의 파괴를 주장한 반의회주의자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었다고 본다. 즉 마르크스 안에 면밀히 살아 숨쉬고 있는 민주주의적이고 사회 자율성을 강조하는 레닌주의적 방식으로 잘못 계승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가 부르주아 국가 기구들의 분쇄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어떤 민주주의 제도를 건설할 것인가에 착안하여 마르크스의 저술을 재해석한다면, 결과는 다음과 같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토대에서 민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들의 실질적 주권성이 실현되는 기조 위에서 중앙과 지방, 또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보편선거권에 의한 대의 민주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과제가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이 과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보다 훨씬 포괄적인 것이지만 의회제도의 파괴를 전제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자율적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뿐 아니라 정체제도 밖에서의 해방적 사회 운동과 제도권 안에서의 민주화 개혁의 유기적 접합을 겨냥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르크스에게 보통선거는 단순히 의회 대의제를 발전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차라리 그것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마르크스는 노동 계급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가 보편화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노동 계급의 정치적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보았다. 또 일단 정치적 권력이 주어지면,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즉각적으로 자본가들의 사회적 권력을 파괴하는 데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했다.(Przeworski, 1985 : 33) 따라서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노동 계급이 의회에 그들의 대표를 보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었지만, 의회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노동 계급의 권력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될 수 없었다. 사회주의의 확고한 토대는 오히려 계급 투쟁에 있다고 보았다. 마르크스의 입장은 “의회를 통하여 획득된 정치 권력은 정치적 권력의 장악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임무를 위해 프롤레타리아를 도와야 한다.”는 것 이었다.(Pierson, 1986 : 21)

이렇게 볼 때, 마르크스의 민주주의 개념은 해방적 사회 운동과의 연계를 상실한 채 제도주의로 빠져든 사회민주주의와 모든 제도의 분쇄로 나아간 레닌주의 양자보다 훨씬 더 폭넓은 것이었다고 추론될 수 있다. 그것은 두 가지 상호연관된 과정, 즉 제도 내에서의 개혁 투쟁과 해방적 사회 운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는 사회적 해방이 제도 개혁만으로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았다. 프랑스의 계급 투쟁에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마르크스의 의미심장한 통찰을 발견한다.

“혁명의 진행에서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중간에 위치한 국민 대중 즉 농민과 뱃띠부르주아지 등이 부르주아적 질서에 반대하고 자본의 질서에 반대하여 나서고 그들이 혁명의 주역인 프롤레타리아트에 자신을 맡길 때 까지 프랑스 노동자들은 한 발도 전진할 수 없고 부르주아적 지배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다.”(Marx, 1850 : 45)

즉 사회적 해방의 결정적 조건은 노동 계급만의 투쟁이 아니라 광범위한 세력 연합에 근거한 노동 계급의 협력모니 구축에 있다는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만으로 자

본주의의 기본 모순이 극복될 수 있으리라 보지는 않았다. 반대로 그는 기존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 운동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조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상의 분석에서 우리는 레닌주의의 유산을 극복할 수 있는 요소가 마르크스의 저술 안에 있음을 확인하지만, 동시에 마르크스의 사상을 민주주의 이론으로 수렴하는 데 장애가 있다는 사실도 강조해야만 한다. 마르크스 시대 이후의 엄청난 사회 구조의 변화 특히 계급 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트론이 어느 정도 적합성을 갖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 계급적 시각이 매우 강한 반면 민주주의 제도에 관한 고찰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면에서 사회주의적 대안을 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 외에도 레닌 이후에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영감과 통찰의 자원으로 받아들였던 빠리꼬뮌에 대한 마르크스의 언급은, 거대 국가에 의한 정치적 조직화의 문제들이 이러한 모델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리 생산적인 것은 되지 못했다. 게다가 정치 사회와 시민 사회의 분리를 극복할 필요성에 대한 마르크스의 주장은 국가의 폐지 또는 마르크스의 유명한 문구를 사용하자면 ‘인간의 통치’를 ‘사물의 관리’로 대체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근본주의의 전략이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마르크스가 혁명적 이행기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승인한 것은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혹자에게는 그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비춰졌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통치의 확장된 민주적 형태를 묘사하는 것이었던 반면, 많은 주석가에겐 마르크스가 그 속에서 중앙집권적 국가 그리고 계급에 기반한 강제적 지배를 주장했던 것처럼 비춰졌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적 이론 체계가 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포괄적 민주주의 개념을 경색시키는 일반 이론으로 발전했다는 데 있다. 하나의 예는 국가·법·이데올로기가 토대의 생산 양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말하는 토대-상부 구조의 체계화한 모델이다. 여기서 국가는 필연적으로 통일된 자본가 계급의 이해 속에서

작동한다고 가정된다. 이것은 부르주아의 지배가 오직 계급에 기초한 모순들이 완전히 작동을 멈출 때 비로소 극복될 수 있다는 근본주의적인 발상으로 쉽게 연결된다. 이러한 통일성의 가정하에서 마르크스주의는 보편적 의미를 갖는 인권과 대의제 등을 너무 쉽게 부르주아의 계급 이해에 관련시키고 부르주아적 지배의 법적 구조와 너무 밀접히 연관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Cohen,1983)

사실 이러한 마르크스주의 형이상학에 대해 많은 비판들이 제기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경제적으로 비결정된 고유한 담화의 정치가 생겨 날 수 있는 공간을 부정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Lacau & Mouffe, 1985) 마르크스주의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투쟁을 경제적 형태에 종속시키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적 축들을 둘러싼 투쟁들의 의미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즉 모든 정치를 계급 정치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투쟁의 다른 형태들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모든 것을 계급적으로 규정하는 갈등 전선에 종속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는 오늘날의 국가와 시민 사회 내에서 민중들의 광범위한 해방 운동들을 설명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Cohen,1983 ; Gorz,1982) 이것은 마르크스 시대 아래 엄청나게 변화된 시민 사회의 세력 관계를 전제하고 하는 말이다. 또 역사적으로 시민권의 진전에 부르주아가 강력히 반발해 왔으며 이 권리가 노동 계급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자본주의와 민주적 권리를 직접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이 과연 근거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단순한 기능주의에 빠지기보다는 한편으로는 근대성의 동력으로서 자본주의적 합리화가 전개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운동 등을 통해 민주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둘 사이의 긴장 관계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이 이미 마르크스에서 발아되었음을 위에서 보았다.

IV. 이중 과정으로서의 민주화

데리다(Derrida)의 해체철학이 요구되는 것도 정확히 이러한 맥락에 서다. 해체철학을 통해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의 개념적 하부 구조에서 형 이상학적 요소들 특히 고전적 변증법에 대한 집착을 제거할 수 있다. 해체는 개명된 마르크스주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정치적 비판의 무기이자 “반형이상학적이고 탈레닌주의적인 실천적 진보를 위한 이론적 밑받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해체는 “권위주의적 통일체에 대한 다원성, 복종하기보다는 비판하려는 기질, 모든 형태의 권력과 지배의 논리에 대한 거부, 동일성이 아닌 차이의 주장, 그리고 국가 보편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조한다.(Ryan, 1988 : 213) 비록 데리다가 제안했던 해체의 개념에는 사회 이론이 결핍되어 있으며 이것이 우연적 간과가 아니라 본질적 결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의 ‘포스트 모던’ 철학을 마르크스주의에 도입하는 것은 흥미있는 연구의 장을 열어줄 수 있다.(Lash, 1989)

나는 위에서 마르크스의 민주주의 개념이 레닌주의와도 다르고 사회 민주주의와도 다른 포괄성과 다층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제 남은 일은 어떻게 그의 사상을 개념화하고, 그 저류를 관통하는 인본 주의적 요소를 포착하면서 미심쩍은 형이상학적 가정들을 제거할 것인가에 있다. 하나의 제안은 그의 사상을 제도 안의 개혁과 민중적 사회 운동을 포괄하는 ‘이중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로 개념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에서 이러한 방향의 논의는 오직 최근의 일일 뿐이다. 예컨대 그람시(Gramsci)의 유산을 이어받은 포스트-마르크스주의자들(Haug, 1987 ; Poulantzas, 1978 ; Laclau & Mouffe, 1985)의 등장이 이와 관련된다.

풀란차스(Poulantzas, 1978 : 141)는 “대중 투쟁은 국가 내부에 인각되어 있다. 왜냐하면 국가 자체가 항상 그것을 감싸고 있는 투쟁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사회민주주의건 레닌주의건간에 결국 권위주의로 전락하고 마는 것은 심각한 결함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민주화의 두 과정을 조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그는 생각한다. 즉 대의민주주의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국가를 변화시키면서 또한 직접민주주의를 신장시켜 시민 사회의 자율적 조직 능력을 확대시켜 가는 과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Poulantzas, 1978 : 250)

힌데스(Hindess, 1983, 1987)는 또 다른 예이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의 경제적 결정론이 적절한 정치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적으로 결정된 계급을 곧장 혁명 주체로 상정해도 좋을 내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 대신 힌데스는 의회 내부와 의회 밖의 민주화운동 전략을 모색하면서 충분히 포괄적인 민주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여 광범위한 사회적 연합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회 밖의 행위도 분명 정당한 투쟁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의회 역시 연합에 기반한 민주적 동원의 중요한 장소라는 것이다.

코헨(Cohen, 1983) · 키(Keane, 1988) 등은 민주 정치의 기반으로서 시민사회 개념을 재정립하는 데 특별히 관심을 쏟고 있다. 그들이 이것을 진지하게 취급하는 이유는 근본주의의 전략을 사회 운동에 적용할 경우 자칫하면 국가와 경제제도를 집합적 운동의 권력에 종속시키는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연대를 지향하는 사회적 결사체가 전략적 관심사를 지향하는 권력 조직으로 변형”되는 위험이 따른다.(Cohen & Arato, 1989 : 500) 따라서 코헨과 아라토(Arato)는 “근본주의의 프로그램은 권력에 의해 시민 사회를 식민화시켜 버려 그것의 진정한 자율 조직과 방어력을 박탈해 버린다.”고 주장한다. 대안으로 그들은 이중적 측면을 지닌 민주주의를 제안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한편으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회 규범, 새로운 연대에 의한 사회 운동, 결사체, 공중의 관심사”가 중요하다. 이 변수는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행위하는 정치적 엘리트에 의해 대치될 수 없다.” 다른 한편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정치개혁가의 역할 역시 필수 불가결하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의 복합성을 고려할 때 국가와 경제를 집합 행위가 직접 통제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두 차원을 결합하면서 그들은 시민 사회가 국가와 경제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민주화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정치적·경제적 민주화 없이는 하위 체계들이 자기준거적 폐쇄 체계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Cohen & Arato, 1989 : 501~512)고 그들은 주장한다.

이에 관련해서는 아마도 헬드(Held, 1987 : 283)의 관찰이 가장 시사적일 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융성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한편으로는 국가 권력의 개혁에,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 사회의 재구조화에 관련된 이중적 현상으로서 재파악하여야 한다. 자율성의 원칙은 국가와 시민 사회의 상호의존적 변형이라는 ‘이중적 민주화’ 과정의 불가피성을 인식함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현대의 논의에로 마르크스의 사상을 연결시키는 것이 여러 모로 가치있고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핵심 과제는 “일견 해소하기 힘든 문제, 즉 전통적 레닌주의와 전통적 사회민주주의가 빠졌던 국가주의의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으면서 혼돈의 축적된 자유와 민주주의적 제도들을 어떻게 방어하면서 또한 사회의 민주주의적 통제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 운동을 대량 확장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 고 결론지을 수 있다.(Pierson, 1986 : 135)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프로그램 안에 구축된 시민사회 개념의 재정식화에 주목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시민 사회는 자본가의 이해나 가부장주의가 지배하는 비국가적 영역으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그 개념은 성·인종·세대·민족 등 법적 권리와 민주적으로 조직된 다양한 사회제도와 집단들로 구성된다. 마르크스주의의 계급 중심주의는 여기서 다원주의적 전략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시민 사회가 계급에 의해 전적으로 점유된다거나 계급 이해에 의해 결정되는 투쟁의 장이라는 관점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시민 사회는 다양한 민

중적·시민적 정치의 기반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서로 겹치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많은 대중적 단체들과 연합들에 의해 수행되는 다양한 투쟁들”이 나타나는 곳으로 파악되어야 한다.(Pierson, 1986 : 180)

이렇게 재구성된 시민사회 개념에는 사회주의적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발상의 전환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피어슨(Pierson, 1986 : 150~151)의 글에서 뽑은 다음 사항들은 우리가 레닌주의를 떠나 대안적 민주주의 이론을 추구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정확하게 예시해 준다고 할 수 있겠다.

- 국가는 대립적 이해들로 구성되고, 따라서 다양한 ‘투쟁의 장’이다.
- 국가는 ‘점유’될 수 있는 제도도 아니고 ‘장악’할 수 있는 권력도 아니다. 국가의 변형은 매우 ‘심대한’ 것이지만,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 국가는 극복될 수 없는 것이며 사멸되지도 않는다. 모든 발전된 사회에서 국가는 필수적이다.
- 자유와 평등에 대한 열망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모든 사회주의 운동은 엄밀히 말해 국가와 시민 사회의 분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들의 명료하고 형식화한 분화의 증대에 기초해야 한다.
- 시민 사회는 열망·생활 양식·이데올로기들의 다원성이 법적으로 보증되는 생활의 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정치의 종언’ 또는 갈등의 종언은 법의 지배를 극복하고자 하는 기대와 마찬가지로 유토피아적이다.
- 해방적 정치는 전적으로 계급에 기반하기보다는 민중-민주주의적 투쟁 속에서 다양한 세력들의 연합에 의해 가능해진다.
- 대의적 의회민주주의와 그것이 확보해 온 권리와 자유들은 제한되긴 했지만 매우 실제적이고 민중적인 성과물이다.
- 직접민주주의에 의해 대의민주주의의 모든 형태를 전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시도는 결국 국가주의로 귀결될 것이다.

V. 사회주의의 새로운 지평

이 글의 배면에 있는 사회주의의 개념은 오랫동안 생산 수단의 사회화로 특징되어 온 전통적 개념과는 물론 같지 않다. 새로운 이미지는 차라리 사회-정치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의 의미는 점점 더 사회 집단들이 국가나 자본 혹은 양자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능력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것이다. 생산 수단의 사회화는 협애하게 발전해 가기 쉬운 해결책이며, 이에 못지 않게 사적 특권 구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사회주의는 곧 입체적 민주주의의 길이며 의사 결정력을 다원화한 공공 영역으로 분산시키는 과정으로 비춰지게 된다. 이 관점은 전래의 자유주의 전통을 수용하면서 훨씬 더 광범위한 사회주의적 사고의 지평을 열어준다.

보비오(Bobbio)가 앞에서 제기했던 질문 즉 “어떤 사회주의인가”에 대한 해답의 한 차원은 시민 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권리들의 새로운 중심성”에 의존한다. 코헨과 아라토(1989 : 502)가 설득력있게 보여 주었듯이 “기본권의 진정한 구조가 없이는 [몇몇 동구 사회의 경우에서처럼] 기껏해야 시민 사회가 형성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지 제도화한 구조라는 의미에서 시민 사회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본권을 확립하고 확장하는 작업은 계몽된 사회주의 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민주적 권리의 효과적 실현을 위한 “배경적 조건으로서 생산과 교환을 사회주의적으로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적 결정 과정이 반드시 생산의 사회화로 미리 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그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견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Pierson, 1986 : 191)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행정 권력을 의회가 다스리고 의회를 국민이 다스리는 민주주의 전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Held, 1987 : 284) 그러

나 조심할 점은 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시민 사회의 자율성과 사회 운동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제도의 전면적 궤멸을 지향하는 것이 되면 오히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시민 사회의 정치는 “자기제한적 급진주의”로 특징지어지며 그것은 ‘위대한 거부’의 총체적 부정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하버마스(Habermas, 1987 : 365)의 진단은 이 점에서 의미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특히 사회 운동이 공격 전술로 정치적·경제적 제도들에 영향을 미치고자 할 때 중요해진다. 대조적으로 방어 전술은 정치적·경제적 권력의 침입에 대항하여 사회 집단들이 축적된 자유를 이용하여 스스로의 정체성과 연대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끝으로 우리는 이 글에서 개진된 이중 과정으로서의 민주화 모델이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다각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한상진, 1989b ; 1990b) 특히 정당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약하고 의회 정치를 특징짓는 게임의 규칙이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제도권의 문제로 고착시키면 협애한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예컨대 노동·환경·평화·민족 등의 문제를 둘러싼 제도권과 사회 운동의 역할 분담과 다양한 세력들의 연대가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사회구성체의 언술적 기초(한상진, 1991)를 강조하는 하버마스(1979)에 따르면 사회구성체는 스스로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변화의 공간을 열어주는 사회 조직의 기본 원칙에 의해 이끌린다고 한다. 하버마스는 새로운 규범의 집합적 학습, 그로 인해 가능해지는 사회 통합에서 사회 진화의 문지방을 찾았다. 실로 오늘날과 같은 세기적 대변혁기에 민주주의는 과연 어떻게 전개되어갈 것인가? 사회 통합의 새로운 열쇠를 찾는 자세로 미래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문헌

방해란

1991 「민주집중제」, 녹두.

차인석

1990 “혁신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이념”, 『계간 사상』 2권 4호(겨울호), 119~152쪽.

한상진

1988 「한국사회와 관료적 권위주의」, 문학과 지성사.

1989a “노동시장의 분배기능과 권력구조”, 『철학과 현실』, 54~64쪽.

1989b “중심화 변혁모델의 탐색 : 中民노선을 향하여”, 『계간 사상』 창간 호, 172~232쪽.

1990a “한국 민주화, 무엇이 문제인가 : 이론과 전략의 과제”, 『사목』 132 호, 24~42쪽.

1990b “사회변혁운동의 민중성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고찰”, 「한국사회의 비판적 인식」(한국사회학회 편), 나남, 439~470쪽.

1991 “사회구성체의 논리와 계급문제 : 다원주의의 복원을 향해”, 「사회계 층 : 이론과 실제」(서울대 사회학연구회 편), 다산, 78~96쪽.

Bobbio, Nberto

1987 *Which Socialism? Marxism, Socialism and Democracy*, Cambridge : Polity Press.

1989 *Democracy and Dictatorship*, Minneapolis : Univ. of Minnesota Press.

Buchanan, A. E.

1982 *Marx and Justice : The Radical Critique of Liberalism*, London : Methuen.

Burns, Rob and Wilfrid van der Will

1988 *Protest and Democracy in West Germany : Extra-Parliamentary Opposition and the Democratic Agenda*, New York : St. Martin's Press.

Cohen,Jean

1983 *Class and Civil Society : The Limits of Marxian Theory*, Oxford : Martin Robertson.

Cohen,Jean & Arato,Andrew

1989 "Politics and the Reconstruction of the Concept of Civil Society," *Zwischenbetrachtungen: Im Prozess der Aufklärung*(Axel Honneth 등 편), Frankfurt : Suhrkamp.

Graham,Keith

1986 *The Battle of Democracy*, Sussex : Wheatsheaf Books.

Gorz,Andre

1982 *Farewell to the Working Class*, London : Pluto.

Habermas, Jürgen

1979 *Communic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ety*, Boston : Beacon.

1987 *The Philosophical Discourse of Modernity*, Cambridge : Polity.

1989 "The Crisis of the Welfare State and the Exhaustion of Utopian Energies", *Jürgen Habermas on Society and Politics*, Boston : Beacon.

Hamilton,M.

1989 *Democratic Socialism in Britain and Sweden*, London: Macmillan.

Haug,W. F.

1987 *Pluraler Marxismus*, West Berlin : Argument.

Held,David

1987 *Models of Democracy*, Cambridge : Polity Press.

Heuer,Uwe-Jens

1989 *Marxismus und Demokratie*, Baden-Baden.

Hindess,Barry

1983 *Parliamentary Democracy and Socialist Politics*,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 1987 *Politics and Class Analysis*, Oxford : Blackwell.
- Johnston, Les
- 1986 *Marxism, Class Analysis and Socialist Pluralism*, London : Allen & Unwin.
- Johnston, M.
- 1983 "Marx, Blanqui, and Majority Rule" *Karl Marx's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Jessop, B. & Malcolm-Brown 편), London : Routledge, 1990에 재수록, 331~354쪽.
- Kagalitsky, Boris
- 1990 *The Dialectic of Change*, London : Verso.
- Keane, John
- 1984 *Public Life and Late Capitalism: Toward a Socialist Theory of Democracy*, Cambridge Univ. Press.
- 1988 *Democracy and Civil Society*, London : Verso.
- Korpi, Walter
- 1983 *The Democratic Class Politics*,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 Laclau, Ernest & Mouffe, Chantal
- 1985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London : Verso.
- Lash, Scott
- 1990 *Sociology of Postmodernism*, London : Routledge.
- Lenin, V.
- 1917 *State and Revolution*(인용 : 「프랑스 혁명사 3부작」, 소나무, 1987, 363~393쪽).
- Marx, Karl
- 1850 *The Class Struggle in France*(인용 : 「프랑스 혁명사 3부작」, 소나무, 1987, 11~138쪽).
- 1852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 (인용은 「프랑스 혁명사 3부작」, 소나무, 1987, 141~258쪽).
- 1871 *The Civil War in France* (인용 : 「프랑스 혁명사 3부작」,

- 소나무, 1987, 261~359쪽).
- Mezhenkov,V. & Skelly,E. (편)
- 1989 *One Way Ticket to Democracy*, Moscow : Progress Publishers.
- Müller-Rommel,Ferdinand
- 1989 *New Politics in Western Europe*, London : Westview Press.
- O'Donell,Guillermo, Schmitter,P. & Whitehead,L. (편)
- 1986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Prospects for Democracy*, Baltimore : Johns Hopkins Univ. Press.
- Offe,Claus
- 1984 *Contradictions of the Welfare State*, London.
- 1985 *Disorganized Capitalism*, Cambridge : Polity Press.
- Pierson,Cristopher
- 1986 *Marxist Theory and Democratic Politics*, 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 Poulantzas,Nicos
- 1978 *State, Power, Socialism*, London : New Left Books.
- Przeworski, Adam
- 1985 *Capitalism and Social Democracy*, Cambridge Univ. Press.
- Ryan,Michael
- 1988 *Marxism and Deconstruction*, Johns Hopkins Univ. Press.
- Spencer,M. E.
- 1979 “Marx on the State: The Events in France between 1848~1850”, *Theory and Society* 7권. 167~198쪽.
- Waller,Michael
- 1981 *Democratic Centralism*, Manchester Univ. Press.
- (한솔 hhj8)